기록적 폭염·한파·호우에 ··· 전남 농어업 피해 '눈덩이'

지난해 농업 592억 피해…어업은 573억으로 1년새 두배 이상 급증 해상월동장 사업 지지부진…문금주 의원 "기후 변화 대응 시설 시급"

전남 농어업 현장이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 한 농어업 피해가 전남에 집중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15일 진보당 전종덕(비례대표) 의원이 해양수산 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어 업피해액은 573억5600만원으로, 전년(218억 4700만원)보다 2.6배(162.5%) 급증했다.

전남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9억5600만원에서 2년 연속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난해 전남 어업 피해액은 전국 1503억8600만원의 40% 가까이 차

문제는 고수온과 적조, 빈산소수괴 등 기후 현상 으로 인한 어업피해 외에도 저수온 피해가 전남 해 안에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 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저수온 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액은 8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저수온 양식장 피해는 2월 말~3월 초 집중 됐으며, 낮은 수온에 취약한 참돔, 돌돔, 능성어 등 을 주로 양식하는 여수 앞바다에 집중됐다. 여수를 중심으로 89개 어가에서 250억1000마리가 한파에 떼죽음을 당했다. 최근 5년 내(2021~2025년) 전 남지역 저수온 어업피해액은 130억원으로, 올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들어 저수온 양식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과 관련, 문 의원은 "수산물이 한파를 피할 수 있 는 해상월동장 등 기후변화 대응 시설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수 남면 안도에 마련할 예정인 해상월 동장 부지는 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지지부진 한 상태다. 현재 운영하는 여수시 월동장 1곳은 양 식장 해역으로부터 70km 넘게 떨어져 있어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장거리를 이 동하면서 생기는 운반비 부담과 수산물 폐사 위험 탓에 월동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수산 물을 지킬 수 있는 월동장과 월하장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해상 양식장을 육상으로 옮기 는 '스마트 양식장' 확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갈수록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에는 북극 한 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수온에 수산물 들이 취약하다"며 "어종별로 고수온, 저수온을 피할 수 있는 월하장과 월동장을 바다 오염을 최소화한 친환경 형식으로 마련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농가에서는 재해 피해가 2년 연속 불고 있

이상 고온과 폭설, 호우 등으로 인한 전남지역 농 업재해 복구액은 2022년 200억원, 2023년 524억 원, 지난해 592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피해 는 봄·겨울에 절반 이상 집중됐는데, 이 기간 이상 저온(121억원)과 일조량 부족(108억원), 대설 한 파(36억원), 호우(53억원) 현상이 주를 이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청래 대표 "법원이 내란 옹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 동구남구을 조직위원장 3인 공모

김용임·문상옥·양혜령 지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동구남구을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3명의 지원자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당 조직강화특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 쳐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

접수 결과 지원자는 김용임 광주시의원, 문상옥 전 광주시당위원장,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등 3명 이다.

김용임 시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광주시당 여성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2대 총선 당시 동구남구을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문상옥 전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고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을 지낸 경 력이 있다.

양혜령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후보로 나섰고, 제5대 광주시의원을 지 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장

향후 절차는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의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어지며, 이후 최종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지역정가에선 동구남구을의 조직위원장 교체가 내년 정치 일정과 당내 조직 정 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당은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임명해 지역 현안 대응과 당 세 확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외교부는 15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16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타 지 역 경보도 상향 조정했다.

대상은 캄폿주 보코산・바벳시・포이펫시로, 보코 산은 8월 한국인 사망 사건이 있었고 두 도시는 범 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 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시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3 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 보(2.5단계)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계속 유지되 며,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가 아닌 전 지역에 는 2단계 '여행자제'가 발령된다.

국감 브리핑

이개호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강화' 예산 반토막"

"재정 열악한 지방 지원을"

광주·전남지역 거점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 감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 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 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 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총사 업비 2030억 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억3400만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



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 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억 6000만원(47.6%)에 그쳤 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 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

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 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 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 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 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기자 swseo@

서삼석 "섬 항로, 정비만 들어가면 주민 발 묶여"

"대체 여객기 의무 투입 제도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 나 검사에 들어가면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이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 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 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없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 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 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 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 는 실정이다.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 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 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 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 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